

멈춰버린 입법부... 시작도 못한 원구성

20대 전반기 국회 종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등 공석 선거 후 협상... 의장·상임위 배분 입장에 차에 조기타결 난망

입법부 공백 상태가 30일 현실화됐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후반기 국회를 다시 가동되려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구성하기 위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 지원에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원 구성 논의는 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전 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지난 29일 임기가 종료됐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도 같은 날 끝나면서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는 모두 공

석 상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단 임기만료 5일 전(지난 24일)에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이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제때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2014년 한 번 뿐이다.

국회 지도부 부재로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

은 방탄국회가 아닌 국회법상 6월 국회의 자동 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면 후반기 원 구성 의지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 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운영의 방탄막을 쳐서 정당이 몰타기 정당"이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 추진, 남북·북미 정상회담 관련 국회 후속 조치 모색을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실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모두 6월 선거가 끝나야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12곳의 결과를 보고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판단이 깔렸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118명)과 2당인 한

국당(113명)의 의석 차가 5석 차에 불과하므로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 내 의석수는 물론 역학관계가 바뀌게 된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국회의장 배출 장점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라지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다른 교섭단체의 존재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다. 국회의장 및 2명의 부의장 선출에 대한 입장이 각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민주평화당은 지난 9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대해 "여당이라고, 다수당이라고(의장을) 자동으로 맡는다는 법은 없다"고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공백 상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서야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현장

전남지사·군수 후보

노형태 "전남 공공의료 강화... 전국 모델로"

노형태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는 28일 '도민이 건강한 전남'을 정책 목표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한 전국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전남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남 서남권에는 행정력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동남권에는 산업단지 특성 살린 산업재해전문병원을, 북부권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와 국립백신연구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부중 전문 도립요양병원 지정 운영,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모든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산모·영유아·노인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승욱, 클린선거지원단 발대

이승욱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29일 강진읍 선거사무소에서 클린선거감시단 발대식을 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클린선거감시단은 30~40대 청년층 자원봉사자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언비어 유포 ▲가짜뉴스 등을 중점 감시한다.

특히 8·9일 진행되는 사전선거에 대비해 읍·면별로 감시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허위비방 등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선거·투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클린선거감시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인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명현관 민주평화당 해남군수 후보는 29일 '해남인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환경 개선과 예·체능 활성화가 핵심이다.

명 후보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야간소극장, 예술인촌,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연구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중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지역 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 어린이·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지원 등도 공약했다. 특히 그는 예체능을 활성화해 '문화예술 고장'답게 해남문화예술회관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유두석 "11개 읍·면 찾아가는 유세할 것"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는 30일 "바쁜 농사철에 어르신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대규모 동원 유세를 하지 않고 찾아가는 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 후보는 "거리 유세·지역 순회 유세 등에서 동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농민과 자영업자, 직장인들의 입장을 배려해 동원성 군중 집회 대신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고 어르신들이 만나 쉽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새벽 6시 황평면 월평리에 위치한 장성군환경관리센터를 찾아 소각과 매립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첫 유세를 시작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대론 참패" 한국당 위기감

TK서도 이상징후 흉준표 책임론 확산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어둡다. 패배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흉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안방'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후보가 앞서기는 했지만 그 격차가 8~9%포인트에 불과했다. PK(부산·경남) 지역의 전망은 더 어둡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가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분위기도 좋지 않다. 여기에 한국당의 대표적인 텃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표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사령탑인 흉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흉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영남 지역 한 의원은 "모든 후보가 흉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 아무도 흉 대표가 지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선거승리를 향하여"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전북지역 후보 등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지방선거 대책 위원회 발대식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임정업 전북도지사 후보, 맨 왼쪽은 박중서 군 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경찰, 이용섭 투표 전 소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조사

경찰이 당원명단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시기에 대해서 6·13지방선거 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4개월 넘게 끌어오다 선거 막판에야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사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당원명단 불법 유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부 사안에서 엇박자를 보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회견담회에서 "당원명단 유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조만간 이용섭 후보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불법 유출된 당원명단을 이용해 지난 1월 당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일자리 창출 업적 등을 홍보하는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민주당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명단을 유출한 민주당 광주시장 전 조직국장 A씨와 당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 후보의 전 비서 B씨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배 청장은 "이번 사건은 예민하고 수사할 것

도 많다. 특히 수사 대상자인 A씨와 B씨 등이 당원명단 유출 등에 대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함에 따라 관련 증거와 정황 등을 찾아 수사기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A씨와 B씨가) 당원명단을 유출한 것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들은 이 후보와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인 이 후보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또 "선거사범은 검사가 지휘를 하도록 돼 있다. 경찰 입장에서선 이 정도 정황과 증거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좀 더 완벽한 증거 등을 요구했다"며 수사장기화의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